

녹색 보호주의 (Green Protectionism)의 동향 및 시사점

안순현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사무관



녹색 보호주의란 환경보호로 포장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최근 일부 선진국의 탄소세 논의를 비롯하여 녹색 보호무역 조치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에 대해 아직까지 일반화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스위스 St.Gallen 대학교 교수 겸 런던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무역·지역경제국장 Simmon J. Eventt는 녹색 보호주의를 “환경정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상업적 이익 획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일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관세가 대표적 예

녹색 보호주의는 크게 협의의 녹색 보호주의와 광의의 녹색 보호주의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녹색 보호주의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정책을 표면적 목적으로 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신설하는 것이라면, 광의의 녹색 보호주의는 자국의 환경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조치,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조치를 포함한다.

녹색 보호주의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

로 미국 하원에서 지난 6월에 통과한 일명 Waxman-Markey 법에 포함된 탄소관세 부과규정을 들 수 있다. 미 하원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2020년부터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을 지난 6월 의결했다.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에 있어 선도적 입장에 있는 EU도 EU 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3국으로 이전하는 소위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우려하면서 탄소관세 부과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탄소 관세 부과에 적극적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6월에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럽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의 탄소 관세 부과 움직임에 중국과 인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탄소관세는 온실가스 규제를 이용한 보호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에서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탄소관세 부과는 선진국이 환경과 에너지 보호를 구실로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 국영기업의 풍력 및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풍력터빈의 70%, 태양열 발전 설비의 80%를 자국 산으로 구매한다는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외국 설비를 차별하고 있다.

인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등적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탄소관세 부과 논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우회적 보호주의 조치

이 같은 녹색 보호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우선 국제사회의 비난 및 WTO 제재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각국은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보다 국제 사회의 비난이 적다. WTO에서도 회원국이 자국 상품과 수입품 혹은 무역상대국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협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도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협조적이고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도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이 탄소관세 도입을 구상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구실로 보호주의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맹비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이 취약한 개도국이 환경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 보호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개도국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은 자국 녹색 환경 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경산업에 자국산 의무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등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거세지는 녹색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 협상 시한이 2009년 말로 임박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대립으로 양측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탄소관세 부과 등 녹색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 협상 및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녹색 보호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만큼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EU 등 선진국이 첨단 환경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관련 기술 후발주자인 개도국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FTA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 FTA 협상 시 환경 분야를 포괄한 협상을 추진할 뿐 아니라 향후 협상 상대국의 환경 기술 장벽 신설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녹색산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이 분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분야 기술표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분야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K**